

● 제28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2. 21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454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용석 의원 외 103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19. 2. 20.
- 다. 회부일 : 2019. 2.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4.19혁명에서부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이어져 오며 민주이념을 계승해왔고, 마침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단죄하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로 이어져왔음.
- 그러나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이미 법적으로 규명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며 역사를 폄훼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범죄 행위를 자행하였음.
-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화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5.18 정신과 국민을 능멸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국민과 역사 앞에 진정으로 사죄할 것과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대한민국 헌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이 송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결의안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할 것과 국회의원 사퇴,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임.

2 결의안의 타당성 검토

-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임.
- 이에 대한 국내·외의 역사적 평가를 살펴보면,
 - 첫째, 노태우 대통령은 5·18민중항쟁은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는 등 역대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으며, 특히 1997년부터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정부 주관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음.
 - 둘째, 입법부인 국회는 1988년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개최를 통한 진상규명 시도, 199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2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5·18광주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법률로 보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 및 관련 국민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고 보상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셋째, 사법부 또한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피고인(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하는 등 5·18광주민주화운동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¹⁾
- 넷째, 국제 연합(UN)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2011년 5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했으며, 나아가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며, 5·18 유공자는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큰 물의를 빚고 있음.
- 이에 대해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월 12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들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망언을 규탄하고 의원직 제명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²⁾

1)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2)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진보연대, 5.18민주화운동부상

- 또한 자유한국당 내 일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아픔 앞에 고개를 숙이고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광주시민께 상처를 드린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³⁾
- 이에 본 결의안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부정하고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인격모독성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소속정당의 출당, 국회 차원의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 국회, 대법원, 유네스코 등 국내·외의 역사적 평가를 비롯한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3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그 역사적 성격을 규정한 민주화운동이 명백하다는 점, 특히 국회의원 신분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적 관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상 가치를 훼손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본 결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자회, 정의당 등 553개 단체가 참여한 ‘5.18 시국회의’가 열림(2019.2.19.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3)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종명 국회의원은 제명을 한 반면, 김진태·김순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를 결정함.